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진상규명을 향하여 걸어온 길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대책위원회 인터뷰

이숙견 상임활동가

2017년 3월 31일 낮 1시 30분(현지시각), 가로길이가 63빌딩보다 70미터 더 긴 선박이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을 항해하던 중 순식간에 침몰했다. 스텔라데이지호에는 24명의 선원이 탑승하고 있었고, 그중 2명의 선원(필리핀)만 구조된 채 나머지 선원들은 9년이 지난 지금도 미수습된 상태로 심해에 갇혀 있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이후 미수습자 선원들의 가족들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선사와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드러내고, 찾고, 묻고 있다. 10월 17일, 허재용 1등 항해사의 가족이자,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대책위원장인 허영주 대표를 만났다.

'사건 종료'에 급급했던 선사와 정부

"선사가 4월 2일 오후 1시까지 부산지사로 오라고 했어요. 외교부와 해수부 공무원들은 아무도 없었고, 선사 직원들만 나와 상황 설명하는데 선원들 수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고 5일이 지나서는 종이 한 장을 보여주면서 선원 직책에 따라 보험금이 다르다며 위로금을 더 줄 테니깐 합의하자더군요. 가족들은 선원 구조가 더 급하다며 호통을 쳤어요. 그랬더니 회사가 개별적으로 가족들과 접촉하면서 합의를 시도하였고, 언론마저도 차단하면서 사건을 빠르게 무마하려고만 했어요."

선원법상 실종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면 보상이 가능하다. 선사는 대형 법무법인을 앞세워 가족에게 최고장을 보내 개별적인 합의를 유도했고, 5월 5일 이르러서는 형식적으로 유지해 온 상황실마저 폐쇄한다. 심지어 가족들이 선사 앞에서 어떤 행동도 할 수 없게 선사 건물 앞 인도에 집회신고도 선점했다.

"2017년 4월 29일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박근혜 탄핵 마지막 촛불 집회가 있었어요. 저희가 무작정 찾아갔어요. 저녁 6시부터 집회

가 있었는데 낮 1시부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오늘 무대에서 한마디만 할 수 있게, 사람들이 우리한테 관심을 좀 가져주기를 바라며 종일 앉아서 기다렸어요. 발언은 못했지만, 다행히 세월호 가족들과 만날 수 있었어요."

'대통령 1호 민원'인데, 진상규명의 길은 아득하기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날 세월호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한문을 전달하여, 문재인 정부 1호 민원이 됐다. 이후 공식적으로 외교부 장관을 만났고 외교부는 주무부처임을 인정했다.

"예산 10억 원으로 실종자 수색을 진행했지만, 구명보트도 실종자들도 찾지 못했어요. 침몰된 선박과 함께 구명보트가 바닷속으로 말려 들어갔을 수 있다는 외교부의 설명을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심해수색을 해서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배 침몰 지점은 심해 4,000미터라 수압으로 모든 게 10원짜리 동전처럼 찌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문가의 설명은 거짓이었다. 가족들이 해외 사례를 검색한 결과 에어프랑스 447, 미국의 엘파로호 선박침몰사건 등에서 심해수색으로 블랙박스와 심지어 유해도 수습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1차 심해수색을 통해 선체와 유해를 확인하다

"2018년 3월 31일이 침몰참사 1년이 되는 날, 시민 문화제를 개최했어요. 그리고 '블랙박스를 회수하라'는 피켓을 들었죠."

대한민국 최초로 침몰 선박에 대한 심해수색을 시작하는 과정은 매우 험난했다. 가족들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국회의원과 언론을 찾아다니며 호소했다. 2019년 2월에야 진행한 1차 심해수색 결과 선박 잔해를 발견했고 VDR(블랙박스)도 회수했다. 사람의 뼈와 작업복도 발견했지만, 수색 과업지시서에 없다는 이유로 유해 수습은 중단되었다.

"블랙박스를 건져 올린 후 고압세척기로 세척하는 등 잘못된 처리로 메모리 칩이 훼손되어 침몰 당시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선원 유해를 발견하고도 수습하지 않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서 외교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외교부는 '정보공개거부' 처분했고요.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1심,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가족들은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 행정소송에 이어 추가 심해수색을 하지 않아 가족들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2021년 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원인 규명과 유해수습을 위한 추가 심해수색이 필요하다는 결정문을 보냈다.

침몰에 대한 선사의 책임을 묻는 재판으로 만들다

2019년 1차 심해수색 직전, 검찰은 선박의 결함을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선사를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기소한다. 가족들은 첫 재판 때부터 부산지방법원으로 찾아갔으나, 당시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족들을 법정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다. 기일마다 법원 앞에서 선전전을 하며 피고인들의 처벌을 요구하였고, 결국 선박안전법 1심에서 선사대표(김완중)의 유죄가 인정됐다. 이어 2심 재판에서는 선사의 대표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선박안전법 위반 1심 재판 때는 가족들만 선전전을 하다 보니 이동, 보관 때문에 우드락으로 만든 피켓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선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선전전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죠. 그런데 2심 때부터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이하 부산운동본부)에서 함께 하시며 연대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진상규명을 향한 가족들의 분투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케 하였고, 부산운동본부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도 함께하게 된다.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부산해심원)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심판이 열린다는 것 또한 사회적참사진상조사위원회 조사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가족들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직접 찾아서 보다가 '이해관계인'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부산해심원에 제기하여 '이해관계인'으로 참석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심판 변호인으로 등록했고, 심판에 참여하면서 침몰참사의 책임은 선사에게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선박안전법과 특히 형사재판에서 해양 심판의 결과를 중요하게 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선박은 너무 특수한 분야라 검찰과 법원도 해심원의 심판 결과를 주시하거든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 1심 판결도 부산해심원의 1심 재결이 나온 다음에야 나왔어요."

2023년 12월, 부산해심원은 허용되지 않는 격창적재·양하(여러 화물창의 화물을 고르게 내리지 않고 일부 화물창을 먼저 비우는 방식)가 침몰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2026년 3월 25일 중앙해심원 재결에서도 선박 개조 이후 선체의 취약과 장기간 피로손상 누적, 선사의 안전관리 소홀까지 중첩된 것으로 봤다. 이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선체 손상과 침수로 이어져 선박이 침몰했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 최초로 해양안전심판에 가족들이 이해관계인으로 직접 참여해 선사의 책임을 인정받은 것이다.

9년 6개월 만에 격창적재·양화의 책임을 인정하다

2021년 말 민변 변호사들과의 회의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소시효를 확인하면서 대책위는 긴급히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선사에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물어야 한다고



▲ 2026.9.17.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형사재판 2심 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사진 : 부산운동본부

검찰에 제기하기 위함이었다. 2022년 공소시효 소멸을 일주일 앞두고 검찰은 선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 재판마다 대책위와 부산운동본부, 연대 시민들은 선전전, 탄원서, 서명운동을 통해 재판부가 선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고,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요구했다.

2024년 2월 부산지방법원은 부산해심원의 재결을 일부 반영하여 불법 개조와 안전관리 부실로 침몰하게 되었다고 인정했다. 선사 대표에게는 금고 3년, 전 해사본부장과 공무감독에게 각각 금고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승인된 적재조건과는 다른 격창적재·양하 방식이 선체를 손상시켜 침몰로 이어졌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9월 17일, 부산고등법원은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격창적재·양하와 침몰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9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대책위에서 확인하고 제기했던 선사의 책임, 검찰이 기소한 선사의 과실 모두를 인정했지만, 원심판결을 깨고 김완중 대표에게 금고 2년의 유죄를 선고하는 등 형량은 낮춰 판결하였다.

"정부, 법원, 검찰 모두 단 한 번도 가족들한테 참여할 수 있다고, 함께할 수 있다고,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묻거나 말해 준 적이 없어요. 정부가 원하는 조기 수습을 하려면 피해자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19년에 헝가리에서 발생한 허블레아니호 침몰참사 때 외교부장관이 찾아가고 중대본도 구성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했잖아요. 피해자가 많이 생겼지만, 허블레아니호 침몰참사 가족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도 애초에 중대본이 설치되었다면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여전히 미완의 과제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 침몰원인을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해 수습이 이뤄져서 더 이상 미수습자 가족이 아닌 유가족으로 남고 싶습니다. 이 모든 소망이 이뤄지려면 결국 2차 심해수색이 꼭 되어야 합니다." 일터